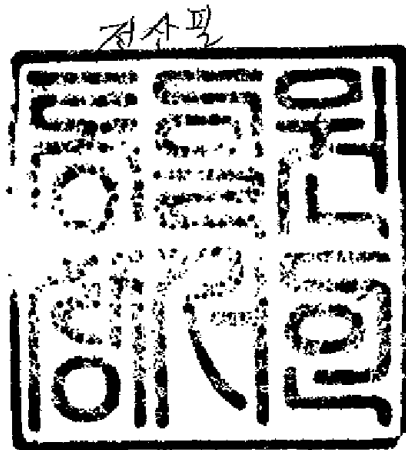


통일과 경제적 과제

3244
통이(은(22).911)



pop
2000

통일문제
통일문제
북한경제문제
남북한경제통합
남북한경제협력

통일원

발간에 즈음하여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세계사적 흐름과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통일은 이제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실현해야 할 현실의 명제이자 대비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원은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통일대비교육의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통일교육용 자료 8종을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소책자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료에는 제1편에 공통 교육 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를 수록하였고, 제2편에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이해" (문화·예술인편),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경찰·공안편) 등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사계 전문가의 글을 분야별로 각각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통일 문제와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며 통일을 준비할 태세를 하나씩 갖추어나가는데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통일원의 공식적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1995. 4. .

교육홍보국

●●●●●●●●
차 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7

I. 머리말 / 9

II.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 10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III. 우리의 통일노력 / 1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정책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1

제2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 25

I. 통일경제 / 27

II.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남북한 관계 / 29

1. 대외 여건의 개선

2. 대내적 상황변화

Ⅲ. 북한의 경제체제 / 33

1. 북한 경제의 일반적 특성
2.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
3.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
4. 북한 경제의 문제점

Ⅳ. 남북한의 경제통합 / 46

1.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2. 정부의 통일방안
3.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4. 통일비용과 자원조달

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65

1. 경제교류 실적
2.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가능성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5.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식

참고문헌 / 88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II.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에만이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¹⁾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비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경제적 피폐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417~432 및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³⁾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응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정용진,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세만 정치적 기본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성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부러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부러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므로써,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혼치 않은 민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메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

이 상 만 (중앙대 교수)

I. 통일경제

최근 구소연방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탈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 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력향상으로 얻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 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북한 경제상황과 대외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구소연방의 붕괴등 여건의 변화는 북한경제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내외 상황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92년 3월에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5월에는

남북경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최근까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은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1994년 12월 정부의 대북경협 활성화조치들을 감안할 때 그동안 민간차원의 간접적인 교류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이 당국간의 합의를 토대로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추진방향과 그 문제점, 경제통합이 우리 민족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일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통합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는 통일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합리적인 경제통합 방안이 마련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한 통일경제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정립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통일경제란 남북한 이질체제 간의 경제통합과 관련된 기초 경제개념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경제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일경제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등 남북의 경제체제의 차이점, 경제통합의 과정인 경제동맹, 화폐동맹 그리고 사회동맹 등 제도적 변화에 관련된 문제점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일 후의 경제문제로는 통합 과도기에 발생하는 부작용들과 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된 과제 등이 다루어 진다.

이와 같은 통일경제는 기존의 경제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통일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통일경제가 기존의 경제이론과 다른 점은 첫째, 통일경제는 두 이질체제의 통합에 관련된 경제이론이라는 점이며, 둘째, 앞으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이 예상되는 민족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Ⅱ.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남북한 관계

1. 대외 여건의 개선

198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대립체제가 종식되고 그 대신 한·러 수교, 한·중 수교 및 북한·일본의 관계개선 등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변국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안정유지를 바람으로써 북한에 대해 개방정책의 실시를 권유하고 있으며, 남한과는 국교수립 이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연방의 붕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남한과의 관계는 태평양 지역국가와의 유대강화와 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에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이용하려는 경제적 목적 등으로 인해 양국간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정상회담에 이어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

미·일의 한반도정책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북미회담을 타결하였으며 이후 북한과의 비정치적인 민간교류의 확대, 고위급인사의 방북 및 접촉허용 등 과거의 엄격했던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장차 형성될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대내적 상황변화

냉전체제의 종식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대립의 완화 등 국제여건의 변화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 대외 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의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부진으로 (표 2-1) 인한 생필품 부족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경공업 육성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주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장, 기업소 등 생산단위 조직의 개편·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외화획득을 위해 개성, 원산, 해산 및 금강산, 묘향산 지구를 외국인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등 경공업과 관광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2-2)

한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시 해 온 북한이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에 대한 물질적 유인의 폭을 소폭이나마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조치로는 농민 상설시장의 확대, 소비재 생산부문의 능력별 임금제 실시, 공업기업소 경영의 독자성 부여, 물질적 유인제도의 실시(털밭 생산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나타난 이러한 북한경

〈표 2-1〉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

	제1차 7개년계획 (1961~67)	6개년계획 (1971~76)	제2차 7개년계획 (1978~84)	제3차 7개년계획 (1987~93)
목표	14.6	10.3	9.6	7.9
실적	8.6	6.0	4.5	-1.7

자료: 통일원 정보분석실.

〈표 2-2〉 북한의 대외개방화 추이

시 기	내 용	비 고
1972. 74	대서방 교역확대기	대 OECD수입이 총수입의 51.7%로 증가
1979. 1	대외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언급	김일성의 신년사
1980	1980년대 말까지 수출액 4.2배 증가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1984. 1	향후 5-6년 사이에 대사회주의권 무역의 10배 확대 및 대외경제협력 대상으로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을 거론	최고인민회의
1984. 9	합작회사 운영법(합영법)의 공포	선진자본, 기술의 도입 노력
1987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무역액의 증가 목표 3.2배로 설정	제3차 7개년계획 발표
1991. 12	'나진·선봉자유경제구역' 지구 개발구상 발표	
1992. 10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채택	
1993.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구역지대법 채택	
1993. 12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채택	노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
1994. 4	대외무역발전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 운용의 새로운 변화는 개방화로의 정책변화라기보다는 경제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편 선진기술 및 자본설비의 도입을 위한 외자도입이 북한경제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채의 비상환으로

인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선이 차단되고 있어, 외자 도입의 한 방편으로 대일수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대북한 교역에서 구상무역¹⁾ 형태를 취해 왔던 구소련 등 동구제국은 북한에 대해 경화²⁾(hard currency)결제에 의한 무역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의 대외여건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내 상황변화는 앞으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Ⅲ.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경제의 일반적 특성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자원의 배분을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 지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같은 기능을 시장이 아닌 국가가 담당하고

1) 두 나라 사이에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의 균형이 취하여지도록 협정을 하고, 다액(多額)의 물품 매매가 되어도 그에 따른 금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절정한 무역방식으로써 물품과 물품의 교환비율을 결정하여 교역하는 것임.

2) 모든 통화와 바꿀 수 있는 화폐, 미국의 달러 등.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 (market economy) 라고 부르며, 사회주의 경제를 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 라고 부르며, 특히 북한처럼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2)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는 사적 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계급대립이 기본적인 모순으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급대립을 제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생산물을 자본가나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으로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제도의 폐지이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전부 국가 또는 사회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1958년의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확립에 따라 북한의 모든 토지, 산림, 지하자원 및 모든 공장과 기업 그리고 상업과 각종 운송수단 등이 국영으로 되었으며 생활수단과 소비생활에서도 국가에 의한 배급제도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소유관계는 국가적 소유를 중심으로 하며 주민들은 다만 당의 할당과 배분에 의해 제한된 사용권만을 지닐 수 있다.

2.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

북한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즉 타국의 경험을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서 오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국 현실에 가장 알맞는 형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를 토대로 하여 북한은 각국의 자연·경제적 조건, 생산력의 발전수준, 과학·기술 발전수준의 상이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되는 경제모델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동시적 추진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부터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큰 변화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자체 내에서 충족시키며,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며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기술낙후, 성장 둔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중공업 우선정책의 지속적인 추구이다. 북한은 산업을 공업, 농업, 기본건설, 교통운수, 통신, 상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1) 그런데 이 중에서 공업, 농업 및 기본건설 부문을 물질적인 생산에 있어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이라고 보며, 특히 공업부문은 생산력 발전이나 생산구조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중공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적인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여타 산업 부분들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은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이다. 특히 1962년 12월 제4기 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1966년 10월 당대표회의에서 국방·경제 병진책을 채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 이후 국민총생산의 약 20% 정도를 계속해서 군사비로 지출해 오고

〈표 3-1〉 북한의 생산적 부문과 비생산적 부문 분류

생 산 적 부 문	비 생 산 적 부 문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생산적 채신 생산적 상업	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 보건, 주택 비생산적 상업 여객수송, 후생경영 주민에 봉사하는 채신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1992. 4) p. 32.

있다. 이처럼 군사비로의 막대한 재원의 투입은 결국 경제건설을 위하여 사용할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지연시키며 나아가서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기본목표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대재생산 이론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하며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노선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

(1) 북한의 공업관리 체계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특히 공업관리체계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발전 단계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개선되어왔다. 북한정권 수립 후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의 초기 공업관리체계는 행정적 관료주의적 지도관리체계인 지배인 유일관리제였다. 이같은 초기의 북한 공업관리체계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계기로 대두된 중앙집권적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배인 단독책임제에 입각한 공업관리체계는 공업생산력 수준이 낮고 관리요원의 자질이 부족한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효율적이었

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산구조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지도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리마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로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되는 '집단관리제'로 관리체계를 바꾸었다. 기존의 지배인 단독책임제는 관료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 전기공장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제시한 공업관리에서의 '청산리 방식'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공업관리체계로 채택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종래의 공업관리체도와 다른 점은 우선 기존의 지배인 단독책임제와는 달리 공장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라는 점과, 기업관리체계와 당의 정치지도체계를 결합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대중을 자발적으로 조직·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업관리체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관리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한 이후에도 북한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공업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계속 보완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1985년 7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를 공업관리체계의 기본단위로 도입한 이유는, 공업의 규모가 한층 커지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부문간, 지역간, 기업간의 생산연계가 복잡 다양해졌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생산조직과 관리운영방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연합기업소의 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트러스트(trust)나 콘체른(konzern)과 같은 기업집단의 형태로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공업생산 유기체”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공업관리체계의 변화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부문이 다양화함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도관리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관리에서 실용주의적인 노선보다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혁명성과 당성이 강조되고 있다.

(2) 북한의 농업관리 체계

북한은 1953년 면을 없애고 리를 대형화시키는 행정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군단위의 농업협동조합, 즉 협동농장 중심의 농업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그 후 북한은 1961~1962년 농업지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1960년 이전의 중앙→도인민위원회→군인민위원회로 이어지던 농업관리체계를 전문적인 농업관리지도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관리체계의 전환은 1960년까지 농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군인민위원회가 전문적 지식의 결여로 관리상

결함을 나타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는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에서 행한 김일성의 현지 교시에 따라 '청산리방식' 또는 '청산리정신'으로 부른다.

청산리방식이란 1960년 2월에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에서의 현지도도를 통해서 제시된 것인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상부사람이 하부사람을 도우는 것. 둘째, 항상 현지실정의 파악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주는 것. 셋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치활동을 선행하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의와 창의성을 발휘시켜 혁명과제를 수행하는 것. 넷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명확하게 연결시켜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활동을 조직화·계획화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3) 북한의 무역관리 체계

북한의 무역관리기구는 중앙정부기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무역업무는 중앙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대외 무역기관과 기업의 관리자에게는 목표과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무역기관은 정무원 무역부이다. 그리고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의 무역촉진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맡고 있고, 과학기술 교류의 촉진은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산하의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위원회가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기관의 통일적 지도하에 무역상사는 상대국과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무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독립채산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특정 공장·기업소나 협동조합 등과 직접 연결되어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수입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무역상사가 많이 설립되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무역상사들은 외국과의 직거래 업무 뿐 아니라 제3국간의 중개무역 업무까지도 취급하는 등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호혜·평등의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정무역에 의한 구상무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형태는 대상국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장기 무역협정과 이에 따라 매년 체결하는 무역협정서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상품 수입 대금을 경화로 결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수출하며 매년 한 차례씩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구상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그들의 중앙은행과 상대국의 특정은행에 무이자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수입액과 수출액을 상쇄시키고, 그 차액은 구소련 루블화로 결제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제3세계 국가들과의 무역은 특정 품목의 수입에 상응하는 상품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수출에 따르는 대금과 일치시키는 유환 구상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이에 반해 서방국과의 무역은 국교가 수립된 대부분의 국가와는 직접 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는 간접무역, 우호무역, 민간무역협정을 통하여 교역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직접무역은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장기 통상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매년의 무역거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무역협정서를 서명 교환하는 것이 통례이다.

간접무역은 제3국을 경유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나라의 은행을 경유하여 대금결제 that 이루어지는 중개무역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우호무역은 상대국에 우호협회를 설치하고 북한의 무역촉진위원회가 상대국의 우호협회에 가입한 상사와 거래하는 형태이다.

민간무역협정은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상대국의 민간단체 사이에 민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4. 북한 경제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5조에 잘 나타나 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리제도는 구소련의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정무원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경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계획·처리하며 노동당의 정책결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보고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상태에 대한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무원의 각 경제관련 부서와 시·도·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정보관리 체계의 문제로서 계획의 제단계에서는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의 경제계획은 획일적이며 경직적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는 데에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둘째,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이 정책분석 기구와 적절히 연계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당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로서는 하부구조는 다만 상부에서 결정한 목표의 세부적인 배분과 목표량의 책임부과를 결정하는 이외에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가 제한적이라

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과 중공업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문간 연계성의 약화와 부문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소비부문의 미발달은 주민생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체제는 정책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당기구를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적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적 관료제는 경직적이어서 합리적이고 분권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행정적 비효율성 때문에 북한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결여되어 수급의 불일치로 물자공급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폐쇄경제 체제

북한은 경제적 자급자족을 정치적 독립의 기본으로 간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여기서 경제적 독립이란 다른 나라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적 재생산구조를 갖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나라 자체의 자원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는 사실상 외국 기

술이나 자본의 도입, 국제분업에 의한 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어 폐쇄적인 경제체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와 같은 폐쇄적인 체제하에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전 산업부문에서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산업부문간 불균형

북한은 중공업 우선적인 발전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경제계획의 전 기간을 통해 변함없이 관철되어 왔다.

196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로 부터 경제원조가 중단되고 국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의 공업 부문 투자 중 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였고, 이와같은 현상은 7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투자의 30%를 넘게 됨에 따라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농업부문에서의 발전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성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Ⅳ. 남북한의 경제통합

1.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 즉 통일효과 및 통일비용의 크기는 통합방식, 양체제의 발전단계, 상대적 경제력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제통합의 부작용, 즉 통일비용의 크기는 급진적 방법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합의 경우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쌍방향의에 의한 통합의 경우가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형태와 통일비용과의 관계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경제통합의 과정은 경제교류·경제협력·공동시장형성·경제통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의 첫 단계는 먼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의 활성화를 들 수가 있다. 간접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실적이 쌓이면 직접교역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직교역의 단계로서 남북한은 이 단계에서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하에서 불자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논의된 이질체제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외화획득을 위한 지원협력방안과 둘째, 자본과 기술협력 등 산업협력 방안, 그리고 셋째로 자원의 공동개발투자 등 합작투자 방안, 넷째, 사회간접 자본의 공동건설 등 공동사업 방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질체제간의 경제협력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형태는 초기에는 외화획득 지원협력 등 상호 편의제공 및 수평적 분업체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그후 산업협력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협력의 단계에서 남북한 경제는 수직적 분업 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산업협력 단계를 지나 남북한이 합작투자를 하는 단계로 경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자본과 기술협력을 위한 장단기 신용차관의 제공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단계로 경공업 및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합작 또는 직접 투자단계로 진전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합작 단계를 거쳐서는 남북한이 사회간접 자본을 공동으로 건설, 이용하는 공동사업의 단계로 경제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단계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화획득의 지원협력 사업으로서는 북한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각종 용역을 염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수직적 분업체계를 이루는 산업협력 단계에서는 임가공 위탁생산 및 하청생산, 부품조달

등을 통한 남북한간 산업협력 이외에도 자본과 기술의 제공이 수반되는 공정간 분업이나 제품차별화 분업 등도 실현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합작투자는 장단기 신용차관의 제공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제품이나 광물자원, 수산자원 또는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투자 등의 방안이 있다. 이 중 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관광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이며 동시에 외화 획득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득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공동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지하자원 개발도 주요 외화획득원 중 하나이며 우리의 원자재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상호 실익을 줄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그러나 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은 회임기간이 길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간접 자본의 공동건설 및 이용을 위한 공동사업으로는 전력, 도로, 철도 및 통신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통합은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 도로의 신의주까지의 연계 및 공동관리는 경제통합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합작투자를 통해 자본 및 기술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의 후기 단계에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된 경제교류를 경제전반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경제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은 여러 단계에 걸쳐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경제통합의 여건조성을 위한 경제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남북한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대한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설치의 단계부터 역외에 대해 공동관세 정책을 채택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형성의 단계로 진전될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의 단계에서는 시장의 상호개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단일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초기 단계가 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은 공동시장 형성의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실물경제 통합의 단계(경제동맹)와 단일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남북한간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화통합의 단계(통화동맹)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동관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합하는 사회통합의 단계(사회동맹)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표 4-1)

이와 같이 점진적 단계를 거쳐 민족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과도기적으로는 이질적 체제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막대한 통합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분단으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룩했던 남한의 경험을 고려할 때,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통합된 민족국가는 동북아에서의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이 예상된다.

〈표 4-1〉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구 분		단 계	내 용
여 견 조 성 기	경제교류기	1. 간접교역 단계	○ 제3국을 통한 불적교류 ○ 다년간 협력 방안 모색
		2. 직접교역 단계	○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불적교류 ○ 후기: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경제협력기	1. 상호편의 제공단계	○ 수출입업부 대행등 외화획득 지원
		2. 산업협력 단계	○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
		3. 합작사업 단계	○ 초기:장단기 신용차관 제공 ○ 후기:정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4. 공동사업 단계	○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통신시설)의 공동건설, 공동이용
통 합 기	공동시장형성기 남북연합기	1. 부문별 경제통합	○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 선정(예: 철강, 석탄)
		2. 자유무역지역 형성	○ 관세 철폐, 무역제한 철폐
		3. 관세동맹	○ 공동관세 정책
		4. 남북한 공동시장	○ 시장상호개방 ○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통합기	5. 경제동맹	○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6. 통화동맹	○ 단일통화창출 ○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 강제정책 통일
		7. 사회동맹	○ 노동관계 통합 ○ 사회보장제도 통합

2. 정부의 통일방안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시된 기존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로 들어선 김영삼 정부가 구체화하여 수립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통일방안에서 준비단계로 간주했던 '화해·협력'을 '통일정책'의 1단계로 명확히 설정한 점이 그 특징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정치·군사·경제부문을 연계한 남북한 통일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화해·협력 단계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화해·협력기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어 군사적 신뢰구축도 확보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관계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현재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상호간의 무력불사용 원칙을 확인하며 이를 위한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해·협력기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에서 시작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고 경제부문에서의 협력과 합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부문에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양 당국자간의 정치적 선언과 신뢰구축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을 실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한 관계 기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군사부문에서는 군비감축의 초보적 단계인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상호 편의제공 단계를 거쳐 남북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산업협력을 통해 산업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합작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초기에는 장단기 신용차관을 제공하고 후기에는 소비재를 비롯한 경공업산업의 개발에 직접투자하며, 사회간접 자본의 공동건설과 이용을 통한 공동사업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함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의 물적·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각 부문별 협력이 제도화되면 비로소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절차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남북연합 단계

남북한은 남북한 연합기 단계에서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과도기적 연합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군사부문에서는 군비의 단계적 상호 동시감축을 비롯하여 군축정형의 상호통보 및 검증실시, 핵무기의 생산·구입의 금지와 검증, 그리고 외국군의 철수문제들을 포함한 군비감축의 최종단계에 이르는 각종 조치들을 공동보조하에 실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경제부문은 남북한이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제한을 제거하여 남북의 경제가 하나의 자유무역 지역을 형성하는 단계로부터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의 단계를 거쳐 생산요소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남북공동시장을 실현해 나가게 된다.

이로서 남북연합기의 정치, 군사, 경제부문은 비로소 본격적인 통합을 향한 과도기적인 연합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가 단일 경제권이 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정치, 군사, 경제부문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 체제는 궁극적으로 쌍방 주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간의 민족적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통일헌법의 채택에 도달함으로써 통일국가체제 형성단계로 발전적인 이행을 하게 될 것이다.

(3) 통일국가 단계

통일국가의 단계에서 정치부문에서는 동질화된 정치, 군

사, 경제체제에로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의 입안과 시행이 잇따르면서 정치체제의 통일이 실현되고 단일주권 국가의 성립이 선언될 것이며 군사면에서의 군비통합은 통일 국가의 군사력 소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군비를 유지하는 과정이 모색되어질 것이다.

한편, 경제부문에서는 인력과 제화 및 서비스의 완전한 이동이 실현되는 실물경제의 통합단계를 거쳐, 단일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운영되는 통화통합 단계로 이행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동관련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가 통합되는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쳐 단일 민족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경제통합의 최종단계를 거치면서 동일한 경제원리와 제도가 적용되는 통일국가는 정치, 군사, 경제부문에서의 완전한 통합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통합이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완전한 단일 민족국가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1) 경제통합의 파급모형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북한경제는 남북한 화폐 단일화와 함께 경쟁원리에 기초한 가격메카니즘의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이질적인 경제체제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개혁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대량의 실업 등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남한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재정적자의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경우 투자의 증대와 노동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산업구조 조정은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고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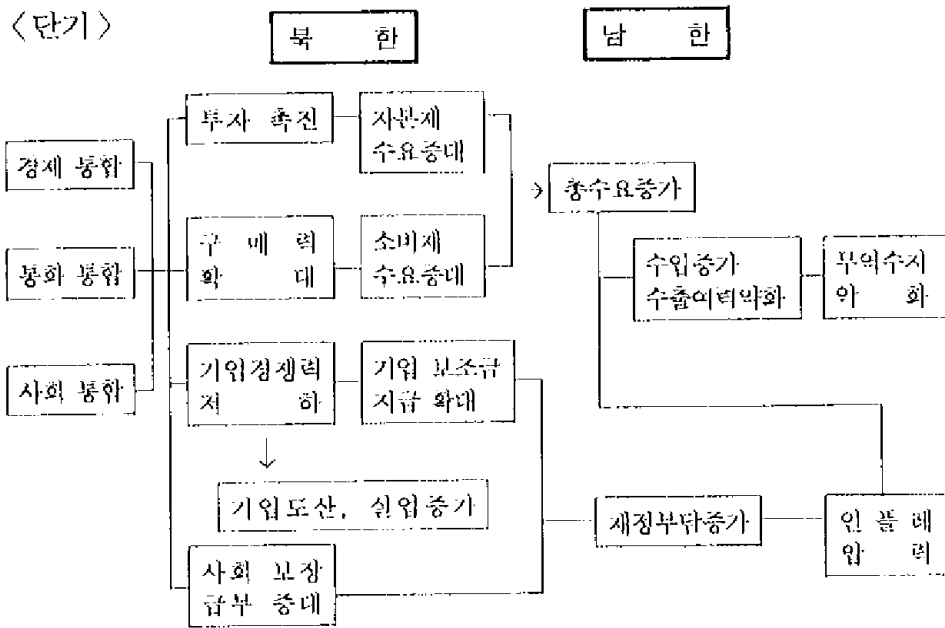
남한경제 역시 북한으로부터 도입된 저렴한 생산요소의 사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경제통합에 따른 국내외 시장의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남한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큰 부담이 되어 온 군사비 지출의 감축은 군사비용의 투자자금으로의 전환과 군사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통합 후 남북한 경제성장에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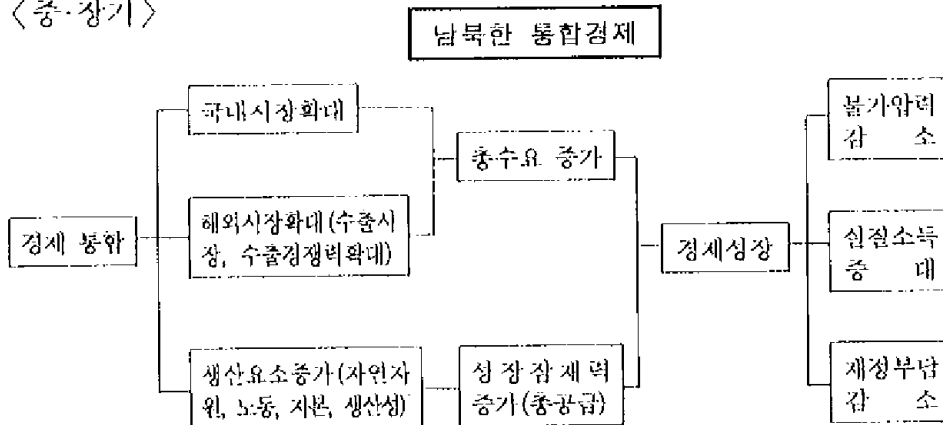
개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경제통합의 파급모형



<중·장기>



(2)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경제적 효과를 동서독의 통합의 예를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많은 한계성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이질체제간의 경제통합으로서 기존의 동일체제간의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경제주체들의 행태와는 다른 반응을 북한지역 주민들이 보일 것이므로 통합 후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① 실 업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남한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고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국영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특히 남한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부문에 실업이 집중되게 될 것이다. 과잉고용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고용구조로 볼 때 통합 후 실업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용상태의 악화가 언제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속도, 북한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속도, 실업노동자의 직업 재전환교

육의 성과정도, 북한 노동자들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노력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의 산업 재조정과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질전환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대량실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합의 과도기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문제는 경제통합의 과도기적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고용대책 마련이 통합경제 당국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대책으로서는 북한지역의 노후화된 산업시설 대체와 함께 북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시설투자가 요구되며, 북한 노동자의 신체적 적응능력 배양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력교육과 실업노동자의 직업 재전환교육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대책으로서는 북한지역 공공부문의 과잉 노동력 흡수방안과 준비감축에 따른 군 인력의 산업 인력으로서의 효율적 전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과 신기술이 북한지역의 생산부문에 얼마나 빨리 투입되는가 하는 문제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이 창출되는 서비스 부문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가에 통합 후 고용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겠다.

② 소득분배

남북한의 통합은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에 따른 비생산적 소모성 지출 특히 군사비 지출의 감소와 이를 복지비 지출로 전환할때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 후 통일정부의 적극적인 분배정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부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하여는 다음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이른바 통일효과에 따르는 통일이익의 공정배분 문제, 둘째, 남북한간의 지역적 소득격차의 해소문제, 셋째, 북한지역에서 통일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이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특정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문제 해결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통일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불하 문제가 주요문제로 제기된다. 국유재산의 불하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사유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사유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가 이루어질 때 북한주민의 기득권 보장문제와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소유지분의 매각방법 등이 통일 후 소득분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기존의 재벌 위주로 이루어 진다면 부의 집중이라는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민주 양성, 사원 지주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국유 불하재산이 국민 전체에 의해 균등히 소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 지역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역시 통합 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1993년 현재 남북한의 GNP는 16:1, 1인당 GNP는 8.3:1 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통합 후 남한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북한지역의 경제불황으로 그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는 통일 후 심각한 지역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경제성장

통일초기 남한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보이는 한편 북한은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침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2~3년 후부터는 북한지역 인력의 재교육과 산업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통하여 남북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중 자연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성장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성장억제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 여건의 변화란 경제통합이 지하자원, 농업자원 등 자연자원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변화란 경제통합이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키며 신기술의 도입과 운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이질체제의 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뜻한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철광석을 비롯하여 석탄자원 등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경지의 경우도 논 면적은 남한이 남북한 전체 면적의 67.8퍼센트이고 북한은 32.2퍼센트인 반면, 밭 면적은 남한이 전체의 34.3퍼센트이고 북한은 65.7퍼센트여서 남한은 쌀생산기반이 큰 반면에 북한은 밭작물의 생산기반이 크다.

이상과 같이 지하자원은 북한이 많은 반면에 농업자원은 남한이 많으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자연자원면에서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구는 한편으로는 소비단위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된다. 현재 인력부족이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통합후 군비감축에 의한 군동원 인력의 생산인력으로서의 전환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투자의 경우 통합에 따라 감소되는 군사비지출은 투자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모두 과도한 군사비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군사비 부담의 경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통합 후 민족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가 되리라 예상된다. 경제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투자재원의 증가를 통해 총공급측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통합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는 총수요 확대를 통하여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통합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북한은 항상 직접투자를 생산적 투자로 우대하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철도, 도로, 해운 등이 모두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발달된 해상수송의 발달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통신 및 수송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무역의 경우도 자연자원의 확대에 의해 자원의 해외의존이 감소되고 인력자원의 증대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자연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통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4. 통일비용과 자원조달

남북한간의 부존자원이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우리 민족경제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통합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으로 남북간 이질체제의 통합은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 바,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은 통합후 우리 민족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 등 외국의 예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통일비용의 요인 등을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통일비용은 통일여건 조성비용과 경제통합의 각 단계에서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체제조정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여건 조성비용이란 통합 전 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남한정부가 지출해야 할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비용이 될 것이다.

한편 경제통합 후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한 체제조정의 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체제조정 비용으로서는 경제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추진되는 실물경제 통합단계, 통화 통합단계, 그리고 사회 통합단계에서의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북한지역 국영기업의 도산과 실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통합 후 북한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의 기업지원비용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드

는 비용 등을 들 수가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통일비용은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국내외의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결과로 볼 때 향후 10년간 최소한 5,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정이 경제통합후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될 불확실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신뢰성이 없는 가공의 수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통일비용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의 조달방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첫째, 경제통합후에 발생하는 내수확대 효과(통일특수)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증대에 의한 재정수입의 증가, 둘째, 국방비등 그동안 지불해왔던 분담비용의 감축을 통한 조달방법과, 셋째, 통합후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시행될 국유재산의 매각등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과, 넷째,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정부공채(통일채)의 발행에 의해 조달하는 방법과, 다섯째, 통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과정에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들 수가 있다.

V.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1. 경제교류 실적

현재까지의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량은 199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총2,718건에 6억 9,802만 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북한물자의 반입은 89년 66건에 1,865만 5천 달러, 90년 78건에 1,227만 8천달러, 91년 300건에 1억 572만 2천달러, 92년 510건에 1억 6,286만 3천달러, 93년 601건에 1억 7,816만 6천달러, 94년 12월 현재 총 2,263건에 6억 5,398만 2천달러로서 91년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비해 북한으로 반출된 남한산 물자는 89년 1건에 6만 9천달러, 90년 4건에 118만 7천달러, 91년 23건에 554만 7천달러, 92년 63건 1,056만 9천달러, 94년 12월 현재 총 455건에 4,403만 9천달러를 기록하여 남북한간 교역비율은 15:1로서 북한산 물자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5-1)

남북한 교역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주요 반입품목으로 금괴, 은괴 및 열연코일, 아연괴, 무연탄, 철강재 등 금속 광산물과 감자, 명태, 오징어 등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반출품목으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데트론솜, 양말직조기 등 최종소비재 관련 경공업 제품과 컬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 보

〈표 5-1〉 연도별 반출입통관현황(1988, 10-1994, 12)

(단위:천 \$)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4	18,622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총계	2,263		653,982	455		44,039	2,718		698,021

자료 :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1995. 1)

면, 교역의 형태는 현재까지 중국·홍콩·일본·싱가폴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초기에는 제3국을 통한 현금결제에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 품목의 내용을 보면 초기의 단순상품에서 반제품으로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건당·품목당 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남한내 참여기업은 종합상사 위주에서 점차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반출품은 대부분 중국·홍콩기업의 상표가 부착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남북한 교역은 반입 위주의 소규모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초기에는 기업홍보차원의 전사용품(일용품) 등이 반입되었으나 그후 광산물·농수산물·경공업 제품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3국의 중개를 통한 남북한간 임가공형태의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크릴사등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반출과 의복, 가방 등 임가공 상품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2.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1988년 정부의 대북경제교류 허용조치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본토대가 마련되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물자교역의 경우 현재까지의(1994년 12월말 현재)통관물량은 총 6억9천8백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남북한간 교역 비율은 15:1로서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산 물자의 반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역의 형태도 남북한간 직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저조한 이유로는 주로 북한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반입된 불량품에 대한 보상장치 미비, 북한취항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납기 지연, 북한측의 일방적 계약파기 등 간접교역에 따르는 문제점과 함께 남북한간에 무역협정, 투자보호 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의 불안감이 높으며 분쟁발생

시 신속공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교역상의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대상품목의 부족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출입규모나 주요 수출품이 광산물, 수산물 등 1차 상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의 교역품목이나 교역규모는 당분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정부의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강조되어 온 것에 비하면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한간 물자교역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상품의 부족이며 이 같은 교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풍부하고 값싼 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합하여 값싼 상품을 생산, 수출하면 북한의 외화부족해소에 도움이 되고 남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강조되었다.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현재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간접교역에 따르는 문제점과 무역협정 및 투자보호 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핵문제 등 정치·군사 문

제와 연계되어 있는 경제 교류의 추진전략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정치·군사문제와 경협이 연계추진 전략은 남북간 경제교류를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핵문제가 해결되고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기술자 방북의 허용 등 1단계 경협확대 조치(1994. 11. 8)가 단행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은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표 5-2)

이와 같은 정부의 경협재개 조치는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무역협정·투자보호협정 등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대외개방 관련법규에도 미비한 부문이 많아 북한과의 교류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위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위탁가공 무역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위탁가공무역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핵문제로 인해 경협이 중단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는 12월 말까지 1,659만8천불어치의 실적을 보여왔다. 이와 같은 실적은 각각 5천만불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독일 및 일본 등과의 위탁교역 규모에 비하면 저조한 형편이다. 우리의 대북 위탁가공 무역이 이처럼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

〈표 5·2〉 정부의 3단계 경제교류협력 추진방안

단 계	사 업 추 진 내 용
<p>〈1단계〉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결제 계정, 환거래계약으로 남북한 직접결제, 상사분쟁 해결 절차 마련 ○ 교역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다양화, 위탁기공을 위한 시설제 반출과 기술자 방북허용, 판문점에 남북회의기구 설치 ○ 핵문제해결 후 제도 마련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분야에 소규모 합작투자(남포공단), 공동어로, 남북한 연계관광, 남북한 주민 관광목적 상호방문,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방제 ○ 제도적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신임재산권 보호 ○ 교통망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포항, 부산항과 북측의 남포, 원산, 천진항간 해로개설, 입출항 절차 간소화 ○ 통신망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 설치, 전신, 전화, 팩스 연결 ○ 관련자료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 통계, 표준 및 공업규격, 환경기준, 경제관련법령, 기상 및 환경관련 자료
<p>〈2단계〉 분야별 교 류협력 활 성화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품목 다양화 및 다양한 교역형태, 개발, 절차 간소화 ○ 제조업, 광업, 농수산,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분야에서는 동, 아연, 흑연, 석재(대리석, 화강암) 공동개발 - 제조업분야에서는 중·대규모의 합작투자와 단독투자 - 농수산분야에서는 곡물, 산림자원개발과 연어공동배양 - 관광분야에서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단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철도연결과 국도 1, 3호선 복원 ○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다각적 교류 ○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부소 설치
<p>〈3단계〉 경협 본격 화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역 전면확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까지 교역규모는 20-30억불 수준 ○ 국내외 자원의 공동개발, 중공업분야와 기술집약적 산업, 관광, 수송,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 합작 투자 ○ 교통, 통신망 확대,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능력제고, 남북한간 항로 및 제3국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 -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사업 지원

출처 : 「신경제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부, 1993, 요약정리

다도 위탁가공 무역에 필요한 기술자 파견이나 생산설비의 이전이 경협외의 핵연계전략에 의해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 및 생산설비의 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위탁가공무역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임금으로 인해 사양화되고 있는 국내 섬유 봉제산업의 유희설비의 대북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남북한 임가공교역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의 경우도 기업가들의 방북허용 조치에 의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남북간 물자교역은 간접교역 위주로 남한에 의한 일방적 북한물자의 반입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북한의 특산물 광산물 등을 중심으로 교역대상물의 확대가 이루어져 물자교역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남북간의 간접교역 체제가 직교역 체제로 전환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남북간에는 직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교역대상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본격적 물자교역은 교역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경협사업의 경우도 투자보호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및 미비한 점이 많은 투자관련 법규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리

라 예상된다. 대북 투자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어온 남포공단
합작사업이나 나진 선봉 지역의 소규모 시범사업 등 특정지
역을 정부가 허용한 이와 같은 초보적 소규모 경협사업이 잘
진전되어 상호신뢰가 쌓이고 투자보호 협정 등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된 후에야 본격화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번 경협의 활성화 조치는 기업가·기술자의 방북을 통하여 교
역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여건을 조성,
장기적으로는 남북교역과 경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가능성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서로 상반된 경제개발전략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경제개발의 목표를 자립에 두고 대외경제에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수요
를 만족시키는 경제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립
적 민족경제'의 구축이라는 구호아래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는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으며,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
조의 고도화를 성취하기 위해 농업보다는 공업을, 경공업보
다는 중공업을, 그리고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반면에 남한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가공생산
에 높은 비중을 둔 경제구조를 형성해 왔다. 시장경제 체제

와 개방경제하의 국제분업주의를 기초로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하고,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업화 전략으로 중점사업은 소비재 → 중간재 → 자본재 → 지식 및 정보산업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현재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북한은 노동과 자원 면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국민총생산이나 총취업 인구에서의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뜻하며, 공업구조의 고도화란 제조업의 총생산중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1975년 이후에 GNP구성 면에서 1차산업(24.9%) < 2차산업(28%) < 3차산업(47.1%)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1990년 현재 1차산업(9%) < 2차산업(31.5%) < 3차산업(59.5%)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구조면에 있어서도 1985년 이후에 1차산업(21.9%) < 2차산업(28.1%) < 3차산업(50%)으로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공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1980년대 후반의 유통서비스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경제통계수치를 발

표하지 않아 신뢰성있는 결과는 알 수 없으나, GNP 구성면에서는 1990년 농업(22.3%) < 기타 생산 및 비생산(32.4%) < 공업(45.3%)으로 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용구조면에서는 농업(38%) > 공업(37%) > 기타 생산 및 비생산(25%)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중진국형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5-3)

한편, 북한의 경우 지난 20년간 고용구조 면에서는 농업인구가 51.3%에서 38%로 크게 줄고 공업인구가 24.3%에서 37%로 크게 늘어났으나 총생산(GNP)면에서의 구성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1970년대 이후 공업생산성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를 통한 각 부문별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산업인 농·임·수·축산업 등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거의 동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후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부 품종의 특산품이 있고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품종에 한하여 수평적 무역이 가능할 것이나 그 규모는 그리

〈표 5-3〉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1990년)

(단위 : %)

	농업	공업	건설	수송 및 통신	상업 및 기타
한국	9.0	31.5*	13.2	7.0	39.3
북한	22.3	45.3	16~17	4.5~5	11~12

주 : *는 「신국면계정」 분류에서의 제조업에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시업을 합한 수치임.

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크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북한의 외환사정을 감안한다면 남한측의 일방적인 구매에 그치고 말 것이다.

2차산업인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 남한측이 우위에 있다. 특히 경공업에 있어서는 품질·수량·품종 등 모든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따라서 경공업 분야가 대북한 진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나 북한측은 제품의 교역보다는 플랜트차관 제공이나 합작투자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소비재 생산의 증대를 통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한편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생활 수준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남한측이 우위에 있다. 특히 정유산업, 석유화학공업, 가전제품등은 남한측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부문도 있다. 금속공업 분야에 있어서 남한이 철강업에서, 그리고 북한이 비철금속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남한이 자동차와 조선업에, 북한이 공작기계공업에서 우세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열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공정간 또는 제품차별화 분업이 가능할 것이다.

(2) 자원구조

자원구조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관광자원의 경우 남한은 이미 상당한 부분을 개발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내국인을 위한 관광에 불과한 것이었다.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자면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나 그 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금강산 등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은 많으나 북한의 폐쇄적인 속성과 투자재원의 부족 때문에 아직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하광물 자원에 있어서는 북한은 철 및 비철금속 공업의 소재와 유연탄 및 무연탄등 에너지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남한은 다만 몇가지 경공업의 원자재가 되는 자원에서만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원수요가 적고 개발도 잘 안 되어 있어 자급자족 상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를 외화획득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자원 부족국으로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그것도 원거리 운송으로 고가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풍부한 지하광물 자원과 화려한 지상관광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고, 남한은 자원 부족국으로서 고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을 갖고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대상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분야가 공동개발 사업에 가장 적합하며 쌍방 이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협력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3) 무역구조

남한의 무역규모는 정부의 외향적 발전전략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북한은 대내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남한과 북한의 무역규모를 비교하면 1970년에 북한은 남한의 무역규모 28억 2천만 달러의 28.6%인 8억 1천만 달러였으나, 1993년에는 남한이 기록한 1,660억 4천만달러의 1.59%에 지나지 않는 26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남한의 급속한 무역규모의 증대는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나친 해외부문의 확대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자립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한편, 북한의 무역정책은 정부의 내향적 성장전략의 수단으로서 수입은 주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재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재화로 제한되었으며, 수출은 필요한 재화의 수입을 위한 외화획득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구소련, 중국, 일본을 포함한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교역량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총무역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이중 몇몇 국가와의 교역량 변화가 북한 무역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 있다.

그리고 수출입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1차산품 중심의 수출과 2차산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완제품 중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중심의 1차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공허 기계 및 운송장비 등에 있어서는 수출입을 병행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출입 상품구성 면에서 남북한이 수직무역 관계에 있으나 부문적으로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평무역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와 자원구조, 그리고 수출입 무역구조를 비교해 볼때 남북한간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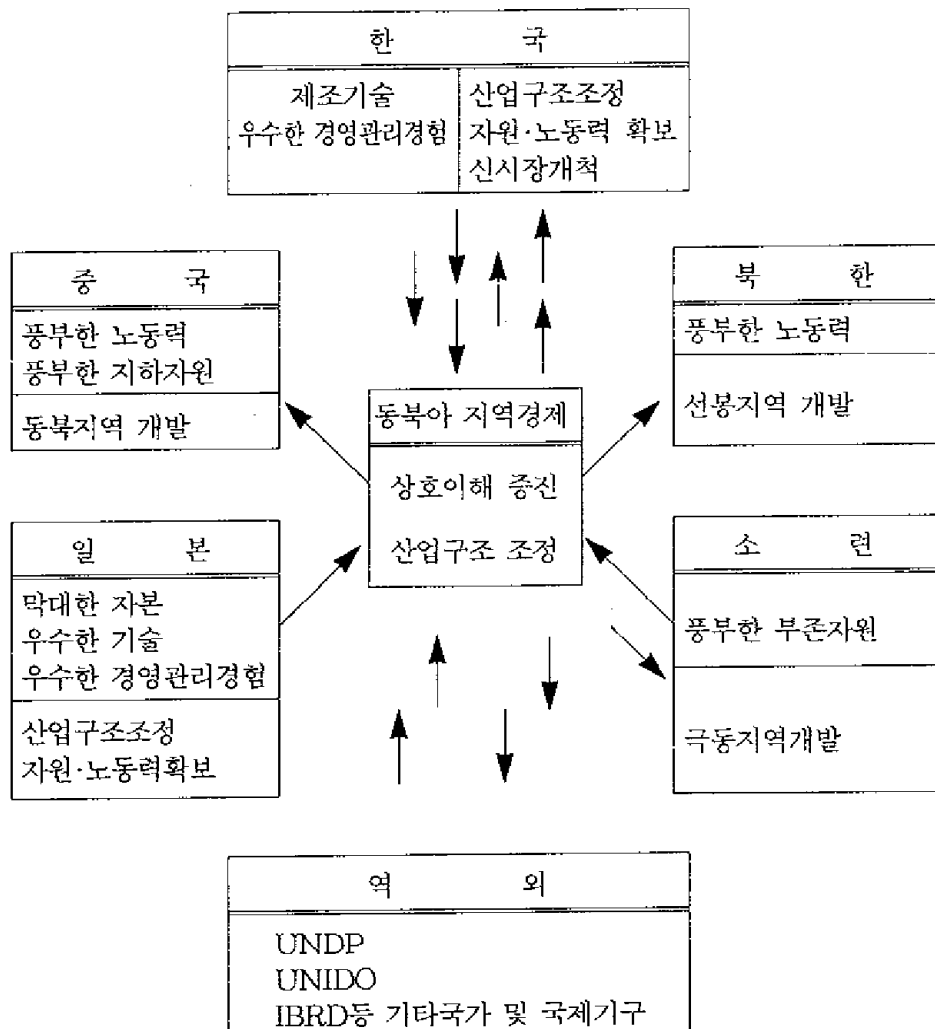
(1) 다자간 협력방식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직접교류를 통하여 교역, 직접투자 및 자본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서 해당국가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방안인데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용방안과 동북아 경제권에의 공동 참여 방안등을 들 수가 있다.

우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활용을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국경무역이나 제3국의 자유무역지역 건설에의 공

〈그림 5-1〉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방식



동참여를 통하여 남북한간 간접교류의 확대를 기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상호신뢰의 기반위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상으로는 평화시 건설과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참여 등이 있다. 특히 평화시 건설안의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비무장 지대의 일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여 남북경제 교류의 센타 역할을 부여하는 구상이다.

그리고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관한 구상의 경우는,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그리고 일본과 남북한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정도, 산업구조 및 자원의 부존면에서 볼 때 관계국가 상호간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남북한의 동북아경제권의 동시 참여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

(2) 위탁가공 협력형태

최근들어 우리 기업과 북한과의 위탁가공형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위탁가공형태의 경제협력이란 수직적 분업형태의 산업협력으로서 남한에서 제공하는 원자재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임가공한 후 다시 남한에 수입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말한다.

최근들어 남한의 대우(신성통상), 코오롱상사, 럭키금성, 쌍용, 삼성물산, 한일합심, 효성물산 등의 기업들이 북한에

서 위탁가공형태로 의류 신발 및 가방등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수출 또는 국내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반입된 제품의 품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는것으로 알려져지고 있어 저렴한 생산비용의 이점 때문에 앞으로 크게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3) 우회협력 방식 (관광 공동개발)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기업 등에서 북한측에 수차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과 미국 등의 재외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한 공동개발이 국내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한 접근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관광지 공동개발은 일반적인 합작투자 사업과는 달리 인적교류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인 만큼 여타의 경제협력분야 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개발형태로는 남북한간의 쌍무적인 협력으로 착수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일본, 미국 등의 재외 한국계 민간 기업을 포함하는 다자간 공동 개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남북한 공동개발 계획이 실현될 경우 남한을 찾는 외국 관광객중 상당수는 연계코스를 이용하여 유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 관광유발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동개발 방식

① 광물자원 공동개발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발 사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이 될 것이다.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교류협력 제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며, 제1차 남북경제 회담에 제시된 양측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서도 수자원 공동개발과 함께 쌍방 공동으로 제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직·간접 교역을 통한 반입품목에는 아연피와 무연탄이 압도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금은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절대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카리만탄 등에서 개발수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개발 상태에 있는 북한지역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남한으로서는 수송비의 대폭적인 절감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북한은 자원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부족한 외화 가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간의 광물자원 공동 개발은 남한 측에게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광물자원 공동 개발에서도 몇가지 제약요인을 예상할 수 있는데, 먼저 북한의 광물자원 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을 들 수가 있고, 둘째, 북한내 부존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 부담을 들 수가 있다. 즉 광물자원 공동개발의 경우 경영 참가문제, 외환 리스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북한산 광물자원의 남한내 유입에 따라 유발될 수도 있는 국내 광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1989년초 경쟁적으로 유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국내 석탄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 예를 들 수가 있다.

② 수자원 공동개발

북한은 수산물을 인민의 주요단백질 공급원으로 삼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주요 수출산업 품목으로 설정하여 생산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남한 역시 현재 국민 총단백질 공급량 가운데 동물성 식품이 34.4%를 담당하고 이 가운데 수산물의 비중은 57.3%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단백질 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자원 민족주의에 입각한 연안 수산자원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수산물 공급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어업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먼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어로 구역으로는 북위 37~39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36~40도, 35~41도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공동어로 작업을 위해서 용기, 나진, 연천, 어대진, 김채 등 어항의 확대 개발이 필요하며 청진, 신포, 원산, 남포 등의 조선소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기술적 교류의 실현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공동의 수산합영회사, 수산물 가공처리 공장의 설립을 제의할 수 있는데, 이를 공동 운영하면 최신 어로장비의 상호교환은 물론 인적교류 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며 냉동품과 맛살 등 수산물 가공품의 기술 이전과 설비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공동 양식장의 설립이다. 남한은 김, 미역, 굴 등의 양식 수산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해서 북한의 웅진양식장에 기술 지원과 함께 공동 양식 생산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공동 어로망을 통한 원양 어업 협력과 어선 건조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오후츠크, 캄차카만 일대에 공동 진출하여 남한 내 수요가 큰 생선인 명태, 청어, 그리고 가자미 등을 반입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어선 건조와 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남한의 선진 기술의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③ 임산자원 공동개발

북한은 남한보다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임산자원을 넓은 지역(총면적의 약 3/4인 9백만ha)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

즉 도별 산림율을 보면 자강도·양강도는 90%, 함경남북도는 80% 이상으로 평양시(40%)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60%이상의 산림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목재는 주요한 산업용재의 하나로 그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목재 자급률은 17.7%로서 82% 이상의 목재수요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제지공업은 60년대 초 수입대체 산업으로 출발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여 60년대 후반에는 이미 90%의 자급률을 실현시켜 내수산업으로서 기반을 확보했고 70년대 이후에는 부분적인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제지공업은 원료 공급산업인 펄프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불균형 상태에서 급성장함으로써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지적했듯이 장백산맥, 낭림산맥, 개마고원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 일대에 상당량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 기술의 부족으로 그 개발과 활용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제지공업은 관련 기술의 미발달 및 펄프 제조에 대한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제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간의 임산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북한의 원목 공급과 남한의 기술과 생산 설비를 결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제지 산업을 건설할 수 있으며, 남한은 해외의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공동개발 사업으로 남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베리아 산림 개발에도 남북한 간 비교 우위에 입각한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간척지 공동개발

북한은 경지면적의 제약과 자연기후 조건의 제약으로 인한 곡물 증산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지면적의 확장을 위해 간척지와 간척지의 개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남한은 도시화·공업화 과정 속에서 농지가 잠식당하고 있으며 공업 용지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척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한의 간척지 공동개발은 북한의 서해안과 지리적으로 유사한 남한의 서남해안 간척사업 경험과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자본기술의 제공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의 간척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단위 경작지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방식

남북한의 제3국 공동 진출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형태로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중국의 만주 삼강평원의 자원 및 농업개발, 베트남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등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남북한 공동 진출은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으로서는 외화 획득과 해외 진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서 남북한 양측간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센터, 「북한의 국토개발연구」, 1991.4.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1994.10
—————, 「통일연구논단」, 각 권 2호, 1993.
- 베르너 뤼쉬라·김원식,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서제일, 「남북한 경공업분야의 협력증진 방안」, 산업연구원, 1994.5.
- 이상만, “중국경제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논문집」, 중앙대학교, 1990.
- , “중국의 대외개방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 논문집」, 제4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 , “남북한 경제교류 전망과 대응전략,” 「황해권의 국제경제협력 구상」, 대한상공회의소, 1990.
- ,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1991.
- ,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추진방안,” 「경제논문집」,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 ,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1991.2.

-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통일방안 논문집」 제3집. 통일원, 1991.
- , 「91년 북한 경제전망과 남북경제교류」. 민족통일협의회, 1991. 3.
- , “남북한 경제교류 실천방안,” 「통일문제연구」. 통일원, 1992. 봄.
- , 「92년 북한의 개방화와 남북경제협력전망」. 민족통일협의회, 1992. 3.
- ,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천방안」. 한국경제학회, 1992. 8.
- , 「북한의 개방화와 남북경제협력」. 해운산업연구원, 1992. 8.
- ,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1992. 10.
- ,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배경과 통일비용의 재원 조달 방법,”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1992. 12.
- ,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협력모형」. 해운산업연구원, 1992. 8.
- ,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천방안,” 「산업연구」 창간호. 중앙대학교 산업연구소, 1992. 12.
- ,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 5권 1호. 통일원, 1993. 봄.
- , “북한의 경제정책,” 「중장기 정책대안 구상연구」. 경

- 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5.
 ———, 「통일경제론」, 형성출판사, 1994. 5.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 「독일통일백서」, 1994. 10.
 ———, 「독일통합과 체제전환」, 1992. 9.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북한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중심,"
 「남북한산업의 구조 비교」, 1994. 6.

통일교육용 자료(8종)

- | | |
|-------------------------------|-------------------|
| •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 전인영(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 박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 이상만(중앙대 교수) |
| •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 이태욱(서강대 교수) |
| •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 이은숙(서울대 교수) |
| •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 한준상(연세대 교수) |
| •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편) | 김문환(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 오문관(경찰대 연구관) |

상공인편

통일과 경제적 과제

1995年 5月 5日 印刷

1995年 5月 10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教育弘報局 教育課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6

電 話 : 7 2 5 - 3 9 4 5

통교 95-4-19

<비매품>